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지역언론 훑어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                         |
|--------|-------------------------|
| ●문서번호  | 지역언론훑어보기2022-03         |
| ●수 신   |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 ●발 신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 ●제 목   | [지역언론훑어보기]              |
| ●모니터기간 |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
| ●날 짜   | 2022년 3월 18일            |

### 지역 건설업체와 부적절한 유착, 횡령 의혹에도 신문사 사장이면 재선임 '보도 안함'



검찰이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가진다면, 언론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가진다. 지역언론은 MBC '스트레이트'가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과 건설사 대표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이래, 일련의 사안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언론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부산일보 앞에서 삭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횡령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수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어 16일부터는 서울 정동의 정수장학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를 보도한 지역언론은 없었다.

3월 11일, 정수장학회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을 재선임했다. 부산일보 노조의 삭발투쟁, 천막농성에도, 부산시민사회의 질의서에도 침묵하던 정수장학회가 통상적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루 앞선 3월 10일, 언론 노조 부산일보지부는 김진수 사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부산일보지부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언론사 사장의 부적절한 유착·횡령 의혹과 정수장학회의 침묵, 미심쩍은 재임 결정 시기, 노조의 투쟁에 고소로 대응. 모두 지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공공의 의제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3월 셋째 주까지 지역언론이 보도한 건 3월 11일 정수장학회 결정인 ‘김진수 사장의 재임’뿐 이었다. 부산일보는 3월 14일 1면, 국제신문은 3월 14일 21면에 김진수 사장의 재임 소식을 전했으며, 재임 결정에 대한 부산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언론 권력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탈원전 백지화’ 공약 짚은 지역방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PK 정치인 연결 나선 지역신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설치 막후엔 박형준 시장 있었다**

이성권 市정무특보, 본인 부인에도 인수위 합류설

‘윤희관’ 장제원, 진로 설정 놓고 ‘행복한 딜레마’

**막강 조직력 野, 지역 각계 지지 이끌며 승리 견인**

KBS부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1년이 되는 3월 11일에, <“탈원전 백지화” 윤석열...여전한 우려>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정권이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후 큰 변화가 예상되는 에너지 공약을 점검해 시의적절했다. 해당 리포팅은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에 주목하면서, 장기적 계획 없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 정책의 부담을 지역이 떠안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부산MBC도 10일, <대통령 인수위에 '부산표 과제' 집중 공약>의 말미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 15일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은 무효" 집단 소송> 보도를 통해 원전지역 시민들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의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결정은 무효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식을 전했다. 이 소송으로 친원전 정책으로 회귀한 윤석열 당선인의 폐기물 저장 계획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당선 이후 일명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면서, 당선인이 공약대로 자신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언론과 야권에서 견제나 공세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그 공약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 한 것이라면 언론은 시민을 대신해 따져 물어야 함이 옳다.

한편 지역신문은 윤석열 당선인과 지역정치인 연결 고리 찾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기사는 부산일보 3월 14일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설치 막후엔 박형준 시장 있었다>(2면)이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구성된 것을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 시장에게 조언을 요청", "윤 당선인에게 박 시장이 최대 조력자 역할을 하는 모습", "윤 당선인은 박 시장과 수차례 만나고 수시로 통화", "박 시장 주변에서는 윤 당선인의 이런 행보에 박 시장의 조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등의 서술을 통해서였다.

지역균형발전특위 설치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역할만을 연결한 기사는 위의 부산일보 기사가 유일했다. 다른 언론들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건의를 받아 윤 당선인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행복한 딜레마'에 빠졌다든가 윤석열 당선인이 박형준 시장을 신뢰해, 박 시장의 최측근인 이성권 정무특보가 인수위원회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든가 하는 기사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3월 11일 열린 박형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은 보도하지 않았다. 정치인에 대한 '어떤 정보'가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지역민의 입장에서 돌아보길 바란다.

## ‘옛 한국유리 터 개발사업’ 부산 2번째 사전협상 대상 확정 한진CY 전철 밟지 않으려면 지역언론 역할 절실



기장군 옛 한국유리터 개발이 부산의 2번째 사전협상 대상으로 확정됐다. 2017년 이 터를 매입한 동일스위트의 개발 계획안은 2차례 반려된 이후 3번째 만에 보완을 거쳐 지난달 사전협상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KBS부산이 전했다.

동일스위트는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8개동을 짓는다는 개발 계획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문화지구 등 비주거공간에도 숙박시설 2개동이 포함되어 자연경관 사유화라는 지적이 있다. 이 계획안에 대해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KBS부산만 이를 자세히 전했다.

KNN은 <한국유리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1천 3백억원 제시>(3/16, 단신)으로 보도했다. 동일스위트 측이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를 제목으로 올려 강조했다.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대상이었던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으로 부산 사전협상제도의 문제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이 사회이슈화 되면서 공공기여금 규모와 방법 등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공론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KBS부산을 제외한 지역언론은 사업자 측이 낸 개발계획을 지역민에게 전달조차 않았고, 이 계획안에 대한 시의원,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외면했다. 지난해 한진CY 개발 계획안이 부산시 심의를 통과하자, 지역언론은 한진CY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CY 사전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처음부터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의회, 부산시, 시민사회, 건설업체 등에서 내놓는 관련 사안을 시민에게 잘 전달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절실하다.